



보 도 자 료

“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”

- ▶ 보도 일시: 8.2(화) 조간,
<인터넷 8.1(월) 12:00 이후>
- ▶ 총 12쪽

- ❖ 기획재정담당관 박종필 ☎02-2110-7111
- ❖ 노사관계법제과장 김성호 ☎02-2110-7332
- ❖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이철우 ☎02-6902-8490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el.go.kr>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>

“공정한 노동시장의 규칙을 세우기 위해 일로매진”

- [노사관계]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안착
- [임금·근로시간] 최저임금 이행지도, 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공정성 제고, 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개선
- [고용차별 개선] 비정규직 개선대책 수립, 학력차별 개선
- [고용안전망]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, 4인이하 사업장 퇴직 급여제도 적용,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

□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“일자리를 더하는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고용노동행정의 각 분야별로 섬세한 접근이 중요하다”면서, “특히, 앞으로 노사관계, 임금·근로시간, 고용차별 개선, 고용안전망 등 4개 분야에서 공정의 Rule을 세워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밝혔다.

< 노사관계 분야 >

- 8.1일로 시행 한달을 맞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순조롭게 정착되고 있다.
- 노조 설립 신고 추세는 초기에 비해 뚜렷이 둔화되고 있고,
* 7월 초순(일 평균 27.8개, 최대 76개~최소 10개) → 중순(일 평균 11.9개, 최대 18개~최소 7개) → 하순(일 평균 8.6개, 최대 12개~최소 6개)

- 민주노총 사업장을 포함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창구단일화 절차가 이행되고 있다.

* 현재 교섭 중인 집중관리 사업장 287개 중 228개(79.4%)가 창구단일화 진행 중(한국노총 사업장 83.5%, 민주노총 사업장 67.7% 이행)

- 신규노조가 기존 양노총에서 분화(74.5%)되어 상급단체 선택없이 설립(86.0%)하는 경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,

- 신규노조의 조합원수가 설립 당시 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양 노총 중심 구도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.

▲(KEC) 13→467명 ▲(서부발전) 5→750명 ▲(서울도시철도) 21→707명
▲(두산모트롤) 47→133명 ▲(KT 네트워크) 14→246명 ▲(인천지하철) 6→97명 등

- 7월말 현재 신규노조 중 조합원 과반수 노조 비율은 28.3%로

-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분화된 90개 노조 중 47개(52.2%), 한국노총 분화 120개 노조 중 24개(20%)로 파악되었다.

* 7월말 현재 신규노조 중 근로자 과반수 노조는 61개(19.6%)

-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 초기 과도기적 갈등 징후도 있으나, 아직까지 노사분규로까지 비화된 사례는 없었으며

- 지금까지의 경향을 볼 때 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운동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

< 임금·근로시간 분야 >

- (임금교섭) 산업현장의 임금교섭은 노사협력 분위기 등에 힘입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.

- '11.7월말 기준 임금교섭타결률은 42.6%로 전년 동기(22.2%) 대비 20.4%p 빠르게,

* 100인 이상 사업장 8,458개소 중 3,602개소가 임금교섭 타결

- **협약임금인상률은 5.2%로 나타나 전년 동기(4.6%)에 비해 0.6%p가 상승한 수준이다.**

* 공공부문: 4.1%, 민간부문: 5.2%

- **(최저임금 이행 지도) 오늘 8.1일자로 '12년도 최저임금(시급 4,580원)이 결정·고시되고, 이는 법정 시한인 8.5일보다 앞당겨진 것이다.**

- 정부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준수되도록 연소자 등 취약 부문에 대한 집중 지도·점검도 벌일 계획이다.

- **(공공기관 임금체계의 공정성 제고) '09년 이후 입사한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조정하여, 내부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.**

- 정부는 '09년 금융위기를 맞아 일자리를 나누고 민간 부문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'09년부터 대졸 초임 2천만원 이상인 공공기관 신입직원의 초임 수준을 낮게 조정할 바 있다.

* 조정내용(평균 △15%): ▲2천~25백(△10%이하) ▲25백~3천(△10~△15%) ▲3천~35백(△15~△20%) ▲35백 이상(△20~△30%)

- 이를 통해 금융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민간부문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성과(임금의 대외공정성 제고)를 거두었으나, 임금의 내부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.

* '10년도 공공기관의 대졸 초임은 민간부문보다 더 낮아짐: ('08) 공공 2,936만원 > 민간 2,440만원 → ('10) 공공 2,538만원 < 민간 2,756만원

-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기업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되,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공공기관내 직원간의 임금체계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.

- 기본적 방향은 “기존직원의 임금(인상)은 낮게, '09년 이후 신입 직원의 임금(인상)은 높게 하는” 下厚上薄의 방식으로 하며,
 - ▲해당기관의 총인건비 범위내(추가 재정지원과 인건비 증가 없음)에서 ▲초임(1호봉)은 현행대로 유지(매년 임금 인상률은 반영)하되, 입사 2년차부터 3~5년에 걸쳐 기존직원과의 임금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.
 - 이를 통해 공공기관 직원간 위화감 해소 및 신규직원의 사기 진작, 조직 활력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 - 정부는 또한 민간에 비해 높은 임금수준, 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의 임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임금안정과 직무·성과급 등 임금체계 합리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.
 - (장시간 근로와 교대제 개선) 그간 단기성과 분배 위주의 노사협상 관행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용의 질적 구조개선 등 노사의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는 바,
 - 현재 자동차업종에서의 주야맞교대제는 우리경제의 위상과 국민적 인식,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개선이 필요하며,
 - 노사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주간연속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도입 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시행방안을 마련할 때라고 보아,
- * 도요타, 닛산, 혼다, GM 등에서 실시 중
- 정부도 노사협의를 통해 마련되는 교대제 개편이 원활히 이루어져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신규 일자리 증대, 아울러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함께 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.

< 고용차별 개선 분야 >

- 우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정규직과의 근로조건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종합적인 '비정규직 개선대책'을 8월중 마련할 계획이다.
 - '비정규직 개선대책'에는 차별시정제도 활성화, 사회보험 가입 확대, 근로복지 확충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,
 - 특히,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거쳐 취약직종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또한,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노동시장에서의 학력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8월중 마련된다.
 -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일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기업의 채용문화 개선,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, 고졸취업 문호를 넓혀 선취업-후진학 확산, 숙련기술인 우대 등의 방안이 집중 검토되고 있다.

< 고용안전망 분야 >

- '11.7.21 개정·공포된 고용보험법에 따라 '12.1월부터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 바,
 - 착실한 준비를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재취업·창업 등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도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
- '10.12월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올 12월부터는 동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.
 - 이에 따라 고용부에서는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퇴직급여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, 이들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서비스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.

- 산재보험에서도 퀵서비스·택배 기사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설계하고, 그 외 보호필요성이 있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해서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.
-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“땀흘려 일하는 분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,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경제·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따뜻한 공정사회로 가는 첩경”이라면서
 - “고용형태, 기업규모, 학력 등에 따라 벌어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, 공정한 노동시장의 Rule을 바로 세우고 제대로 자리잡도록 하는데 주력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.

<붙임>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시행 상황